

# 1. 감사 청구 사항

## 1)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 부적절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승인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에 현저히 위배되고, 전력공급 안정화 및 친환경 발전소 대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미 승인된 석탄발전 설비에 대해서 공익을 우선해 승인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거 제시 없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논란을 거듭해온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우려와 지역 갈등으로 인해 수년간 승인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각층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하반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새로운 에너지 전력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특정 기업의 특혜 소지가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의결했으며, 이를 이른 시일 내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공중보건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력공급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발전 확대 정책이 심각히 충돌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2)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의 타당성

- 2016년 6월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석탄발전소를 지목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석탄발전 관련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석탄발전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와 설비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폐지되는 설비에 비해 단기적으로 대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증설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오히려 상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설비 확충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 ▲전원구성 시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조화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향후 15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최대 비중으로 계획해 상기 원칙과 상반된 석탄발전설비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력수급 여건의 변화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 대두,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환경과 안전 급전 원칙의 수립,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변화된 상황을 정부는 반영해 진전된 전력수급 계획을 작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갇혀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인 모든 지역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 정부의 해결 의지는 매우 부족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이 공공성,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 2. 청구 이유

### 1)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협 요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국내 인구의 질환과 조기사망을 유발한다고 연구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승인을 강행하려 하면서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2015)’ 연구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화력발전소 대기질 영향으로, 24시간평균 미세먼지(PM2.5)의 경우 환경기준치( $50\mu\text{g}/\text{m}^3$ )의 49%( $24.56\mu\text{g}/\text{m}^3$ ) 수준이 증가됐고 8시간평균 오존(O3)의 경우 환경기준치(60ppb)의 157% (94.26ppb)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 가중농도로 인하여 연간 국내 조기사망자수는 1,1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며, 발전소 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30년간 34,320여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린피스와 하버드대의 공동연구(2016)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해 뇌졸중·폐암 등에 걸려 매해 640~1600명(2014년 기준)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정부가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지어지는 2021년부터는 그 수가 1100~28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특히 미세먼지가 폐암 발병률의 증가와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및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저농도의 미세먼지 역시 건강영향을 일으키며 따라서 “건강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미세먼지 최저기준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가능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오염 관리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함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일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황산화물의 경우 모든 측정소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소산화물은 255개 측정소 중 196개만 기준을 만족해 달성률이 77%를 기록했습니다. 오존은 달성률이 0.4%로 가장 저조했으며, 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24시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달성률은 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추세로 가면 한국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는 주요국 중 최대에 이를 수 있다고 국제기관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들에 대한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2060년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100만명당 조기사망자 수를 나타낸 조기사망률은 2010년 현재 한국이 359명으로, 이는 일본(468명)이나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412명)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미국(299명)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조기사망률은 359명에서 1천109명으로 3.1배로 급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인도, 동유럽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한 의료 비용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GDP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오염으로 2060년 연간 세계 GDP의 1% 수준까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인 GDP의 0.63% 손실을 전망했습니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도 한국은 대기환경에서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2)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 2017년 4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충남 당진에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최종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이 2016년 5월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국내 배출총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수도권과 바로 인접해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의 수도권 미세먼지(PM2.5) 기여율이 최대 28%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

급했습니다.

-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 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최근 건설 및 가동을 시작한 석탄발전소도 충남 지역에 계속 입지하면서 환경 및 건강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6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규모의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 및 건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새롭게 가동된 신규 석탄발전소의 3분의 2 가량이 충남에 해당했고, 당장 2017년 추가 가동될 6기의 석탄발전소 중 3기가 충남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표〉 2016년 이후 가동 및 건설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회사	발전소	위치	용량(MW)	가동(예정) 연도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9호기	충남 당진	1,020	2016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10호기	충남 당진	1,020	2016
한국남동발전	여수1호기	전남 여수	350	2016
한국서부발전	태안9호기	충남 태안	1,050	2016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호기	강원 삼척	1,022	2016
한국서부발전	태안10호기	충남 태안	1,050	2017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2호기	강원 삼척	1,022	2017
GS동해전력	북평1호기	강원 동해	595	2017
GS동해전력	북평2호기	강원 동해	595	2017
한국중부발전	신보령1호기	충남 보령	1,000	2017
한국중부발전	신보령2호기	충남 보령	1,000	2017
한국중부발전	신서천1호기*	충남 서천	1,000	2019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1호기	경남 고성	1,040	2020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2호기	경남 고성	1,040	2021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 1·2호기	강원 강릉	1,040	2020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1호기*	충남 당진	580	2021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2호기*	충남 당진	580	2022

-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밀집으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인 충청남도에는 해당 지역 내 주요 환경오염 지역으로 발전소 4개 지역, 당진 제철 단지 및 서산 석유화학 단지 인근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2013년 4월~12월까지 실시한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요중 비소의 노출기준(400ug/L) 이상 해당자들이 조사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단국대의료원 환경보건센터의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보고서(2014)에 따르면, 요중 수 은 농도 노출기준(3.5ug/L) 이상 해당자가 많았고 타연구 결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충남 주민건강조사 대상자의 요증 비소 및 수은 조사 결과

구분	요증 비소(ug/L)				요증 수은(ug/L)			
	<400		>400		<3.5		>3.5	
	명	%	명	%	명	%	명	%
합계	327	83	68	17	383	98	9	2
당진발전소	58	89.2	7	10.8	62	96.9	2	3.1
태안발전소	57	81.4	13	18.6	63	91.3	6	8.7
보령발전소	83	89.3	10	10.8	92	100	0	0
서천발전소	33	61.1	21	38.9	53	98.2	1	1.9
당진제철	96	85.0	17	15.0	113	100	0	0

출처: 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 2014,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보고서

-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밀집으로 인한 환경 사회적 비용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인희, 오혜정(충남연구원)의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2013)’에 따르면, 충남지역 15,252M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111,021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 원으로 국내 총 비용의 37.5%에 해당했습니다.

〈표〉 지역별 오염물질별 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CO	NOx	SOx	PM10	VOC	합계
전국	362,909	890,418	710,151	81,701	11,913	2,057,091
서울	5,333	3,714	44	348	169	9,607
부산	23,353	8,536	3,603	2,408	743	38,644
대구	1,068	6,790	10,497	580	40	18,975
인천	91,034	69,798	57,359	10,009	2,846	231,047
광주	1,168	3,679	9	116	37	5,009
대전	624	3,470	5,275	116	35	9,520
울산	22,637	73,129	72,182	4,700	960	173,609
경기	46,671	74,719	24,093	5,222	1,569	152,274
강원	8,121	23,079	33,310	1,741	559	66,810
충남	84,676	379,725	270,459	33,742	2,588	771,190
충북	337	1,433	923	145	20	2,858
전남	14,336	74,690	80,294	6,818	516	176,654
전북	6,007	8,304	8,138	870	187	23,507
경남	43,632	125,612	114,257	13,491	1,238	298,230
경북	1,039	13,892	20,585	493	32	36,042
제주	12,881	19,846	9,113	899	367	43,107

자료: 이인희, 오혜정(충남연구원), 2013,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 3)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석탄발전 설비의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타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연간 증가율을 2.9~4.1%로 전망한 것에 비해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은 0.6%~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0.6%를 기록해, 6차 계획에서 전망한 3.4%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폭염 등 기후적 요인에도 전년 대비 2.8%를 기록해 7차 계획에서 전망한 4.1%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림〉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증가율 전망 및 실적(단위: %)



- 제6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 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15%와 수요·공급 불확실성(7%)을 감안한 22%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전력 생산을 하지 않아도 가동대기 중인 발전기에 대해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량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전하지 않고 대기하는 발전기가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발전사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에게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예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가동률은 보장되는 반면, LNG화력발전의 가동률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 화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표〉 전력 설비 예비율 및 공급 예비율 추이 (2007~2016년)

연도	설비용량 (만kW)	공급능력 (만kW)	최대전력 (만kW)	공급예비력 (만kW)	설비예비율 (%)	공급예비율 (%)
2009	7,331	7,207	6,680	527	9.7%	7.9%
2010	7,608	7,575	7,131	444	6.7%	6.2%
2011	7,613	7,718	7,314	404	4.1%	5.5%
2012	8,181	7,997	7,599	399	7.7%	5.2%
2013	8,230	8,071	7,652	419	7.6%	5.5%
2014	9,322	8,936	8,015	920	16.3%	11.5%
2015	9,410	8,793	7,879	914	19.4%	11.6%
2016	10,018	9,240	8,518	721	17.6%	8.5%

출처: 전력거래소, 2017,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설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설비 확충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원구성 ▲전원구성 시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조화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 중심으로 설비 확대가 계획됐습니다.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 22% 목표를 설정하고 총 발전설비 규모를 139,815MW로 정했고, 이 중 석탄 화력발전소 27기(23,260MW)를 증설하기로 반영했습니다.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 중 4기(영흥 7·8호기, 동부하슬라)를 취소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18,144MW 추가돼 2014년 대비 67.5% 늘어날 계획이며, 전력 비중은 26.8%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전망됐습니다. 현재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향후 15년 이후에도 최대 전원으로 유지되는 계획 수립은 ‘저탄소 전원구성’ 원칙에 위배되며,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4)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 다수 시민들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올해 3월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 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습니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2016년 7월,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좁은 국토에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밀집한 결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각계각층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충남도는 4월 6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이번 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진에코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진시를 포함해 2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꾸려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1일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4명의 국회의원들도 12일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광범위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원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집하려는 정부 행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진시장의 당진에코파워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견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TF)가 구성됐고, 최근까지도 일방적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스스로 깨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과 행정 원칙을 무참히 깬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적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시급하고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5)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 당진에코파워 소유 지분은 현재 대기업인 SK가스가 51%,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34% 그리고 산업은행이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해당하는 한국동서발전과 산업은행이 대기업의 발전사업을 위해 정책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해온 셈입니다. SK 그룹은 당진에코파워 외에도 경남 고성에서 추진되는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한 송전설비 확충을 위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이전 사업자인 동부건설이 추진하는 동부화력 발전소가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2010년,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당진화력이 공급하는 765kV 송전선로 2회선(1회선 운영, 1회선 예비) 동시 고장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당진화력~북당진간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기업을 민간발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 기업의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 송전선로(345kV)를 국민 세금을 통해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발전사업뿐 아니라 산업계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5년 부문별 전력소비량 비중은 산업부문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2005~2015년 동안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량은 57.3% 증가해 가장 높았고, 상업과 가정 부문은 각각 34.0%와 25.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이 발전, 송전, 소비 등 전력산업에서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 국민에게 부담과 비용을 전가시키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면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 6)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 최근 4월 1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진에코파워 승인 관련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절차”이고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설립 계획 취소는) 산업부가 재량권이 없는 법적 기준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 실시계획의 취소는 정부 재량권이 없는 법적 기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하지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승인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나 ‘안전성 결함’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정부 차관이 대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재량권이 없다며 언급하는 것은 직무를 해태하고 사업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성이 결여된 이러한 인식과 철학을 가지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의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귀결되는 우를 범할 것으로 우려되니, 전원개발촉진법과 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